

전북도 통합부채 1조5000억원 넘어

허남주 도의원, “도민 1인당 81만 3130원… 본청 9064억·전북개발공 5247억·출연기관 1113억”

전북의 통합부채가 1조 5,000억원을 상회해 도민 1인당 80여 만원의 빚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허남주(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이 22일 예산심의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난해 결산 기준 본청과 전북개발공사 출연기관 내부거래 등 통합부채가 1조5,172억3,200만 원이다.

이는 전북 인구 186만5,900명 기준 도민 1인당 81만3,130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주장이다. 부채현황을 보면 도 본청이 9,064억 4,500만원,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5,247억2,000만원으로 분석됐다. 또 남원의료원 등 12개 출연기관이 모두 1,112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특히 공기업인 전북개발

공사의 금융채 2,010억,5100만원 등을 포함한 5,247억2,000만원의 부채는 전 북도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2014년 결산 기준 공기업 부채비율 396.44%를 접하면서 전국 공기업부채비율 평균치인 70.93%의 5배가 넘고 있으며, 동종 단체비율 263.40%를 훨씬 웃돌고 있어 시급한 개선노력이 필요하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12개 출연기관의 부채 1,112억7,500만원은 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출연기관들이 오히려 도민들에게 빚을 부담하게 하고 도정에 압박을 준다면 철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부채 감소를 위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민형 기자

정부, 최순실 특검법 한일 군사정보협정 의결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과검감사 20명·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도 의결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 GSOMIA를 재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 뒤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오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나카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협정은 양국 대표가 서명을 마친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통보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발효된다. /뉴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답변

2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송하진 지사가 최인정 의원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관련, 일문일답에 답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소신 행보’ 주목 받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 올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성난 민심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의 소신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자백’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김 시장이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사실상 상영이 거부된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을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스크린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뉴스타과 최승호 PD의 첫 연출작인 영화 ‘자백’은 최 감독이 40개월 동안 4개국을 넘나들며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파헤친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영화제 준비 당시 최 감독은 “국내 상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해외 영화제부터 출품하자”는 우려 섞인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김 시장의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됐다.

이후 자백은 전주독립영화제작소를 중심으로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돼 역대 정치·사회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현재 ‘무현, 두 도시 이야기’에 이어 역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중 흥행 6위를 기록 중이다.

김 시장의 이 같은 결단력 있고 소신있는 행보는 최근 ‘세월호 열’ 전시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윤창현 광주시장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행보로 김 시장은 부드럽고 여린 이미지와는 달리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체장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재 김 시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지난 5월과 12월 연이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퇴진운동에 계속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시장은 “정의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타협하지 않고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민주노총 파업이 국민 더 힘들게?”

유성엽 의원의 노조혐오 발언 도마 위

유성엽 의원의 노조혐오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국회의원 유성엽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이 강행되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격정과 불안이 많은 국민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유 의원의 발언이 국민의당의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당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당 공식 입장이 유성엽 의원의 발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성엽 의원 발언은 조중동, 새누리당이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떠들어대던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헌법을 파괴하며 온갖 부정축재를 하며 국민 이익에 반하는 정책들을 쏟아낸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을 무효화시키고, 정권이 파괴한 헌법 정신을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러나 유 의원은 보란 듯이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의 권리를 문제 삼으며 민

주노총의 정당한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유 의원의 이런 태도는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해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을 땅 값, 세금, 규제, 노조가 없는 4無 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세월호 사건 보도를 통제한 데 대해서는 ‘안 들리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며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난했다.

특히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을 때에도 다른 의원들과 달리 이에 답변을 회피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위기를 부르는 것은 재벌이 이익을 독점하는 부정 의한 경제 구조”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경제 구조 개혁으로 경제를 살리는 파업이며,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파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성엽 의원의 주장과 달리, 불의한 정권에 맞선 저항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우리는 4.19 의거를, 80년 5.18 광주항쟁을, 87년 6월 항쟁을, 87년 7.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불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

안호영 의원, 안전처 특교세 36억 확보

완주군 12억·진안군 12억·장수군 7억·무주군 5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은 2016년 하반기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으로 36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의 세부사업은 전북 완주군 호동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6억원과 목동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6억, 진안군 대유지구 호안정비사업 9억, 우하지구 사면 및 배수로 정비사업 3억, 무주군 설천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 5억, 장수군 감치 세천 정비사업 7억원 등이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정밀 안전점검 결과 시설노후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 저수지를 붕괴 등의 재해위험에서 예방하고, 가뭄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은 “이번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확보로 인해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주민들의 자연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16 - 1448호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1.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완주 3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고산면 서봉리 739-3번지 일원	4,085	(증)416	4,501	완주군고시 제2004-429호 (‘04.11.19)	

나.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완주 3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 면적 변경 - 기 정 : 4,085㎡ - 변 경 : 증)416㎡ - 변경후 : 4,501㎡	○ 당초 하수도시설 증설대상지 변경

다.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사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1	체육시설	생활 체육시설	고산면 읍내리 906번지 일원	20,812	(감)1,469	19,343	완주 고시 2003-452호 (2004.1.2)	

라.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체육시설	○ 면적 변경 - 기 정 : 20,812㎡ - 기 정 : 감)1,469㎡ - 변경후 : 19,343㎡	○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대상지 변경에 따라 체육시설 구역계 변경

2. 열람(의견제출)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의견제출)장소 :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고산면사무소
4. 관계도서 : 실용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3일 완 주 군 수

진안군 공고 제2016 - 776호

진안군 무릉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 14조 및 15조 규정에 의거 진안군 무릉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무릉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무릉리 ~ 대불리
○ 사업범위 : 4.42km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6. 11. 23 ~ 12. 20 (20일간,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진안군청(안전재난과), 주천면사무소
○ 공람내용 및 관련서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하천 위치	설명회 장소	일 시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 대불리	강촌마을 마을회관	12월 02일(금) 11시 00분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장소 : 공람장소
○ 제출방법 : 서면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 제출)
○ 제출내용 : 본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환경회 개최 요구 등
5 기타 문의사항은 진안군 안전재난과(☎063-430-2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3일 진 안 군 수